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3
----------	-----

발의연월일 : 2020. 6. 24 .

발 의 자 : 민홍철 · 김병욱 · 기동민
김두관 · 천준호 · 서영교
고영인 · 안규백 · 신정훈
박성준 · 이병훈 · 이재정
의원(12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자치분권

회의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2조).
- 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함(안 제3조).
- 라.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국가자치분권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 ①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부총리
4. 행정안전부장관
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자치분권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배석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자치분권회의의 운영) ①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④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자치분권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국가자치분권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구성원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과 제3조제1항제5호의 각 구성원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가 시·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국가자치분권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 결과의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